

정보격차 해소... 사랑의 그린PC 보급

전북도,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520대

전북도는 사랑의 그린PC 520대를 전북도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시, 군과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그리고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http://lovepc.nia.or.kr>)를 통해 3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은 전북도민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중고PC 등을 기증받아 정비와 프로그램설치 등의 과정을 거친 양품화된 PC를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한 개인 및 기관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북도는 약 6천만원을 들여 520여대의 PC를 보급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에는 개인보급, 하반기에는 기관보급을 할 예정이고 보급사양은 CPU(코어2듀오), 메모리(4GB), HDD(320G), LCD 모니터(19인치), 윈도우10, 한컴오피스 네오, 알약 등이다.

보급된 PC는 사용 중 장애와 애로 사항에 대해 1년간 무상으로 삼성(271-0001)을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서는 매년 재활용PC 보급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재활용PC를 기증할 기관이나 단체는 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280-2598)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5년간 3,567대의 PC를 보급하였고 "앞으로 컴퓨터가 없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12일 의정실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회계분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7명(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5명)과 도의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월 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지난해 전북도(5조7,924억원)와 전북도교육청(3조1,926억원)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검사한다. 최종 결산서는 오는 9월 회기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황현 의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도민의 시각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도의회 임시회 개최 제3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북도,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14개 시군에 5개반 편성·운영... 경운기 등이 수리대상

전북도는 영농기 이전 농기계 순회수리 반을 편성 운영하고 농업인들이 영농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영농철 농업인들이 농기계 고장과 수리불편,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 등 농업인들이 농기계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활동은 농업인이 콤바인,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고장 시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봄 가을철 2차례 실시해 오고 있다.

봄철 농기계 수리봉사에는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

기업(주), LS엠트론(주), 아세아텍(주) 등 5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함께 한다.

수리봉사는 14개 시·군에 5개반으로 편성운영되며, 전문 수리기사 8명과 5대의 차량으로 추진 중이다.

일정은 각 제조업체별 순회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읍 면별 일정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여 수리를 받으면 된다.

수리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등 정동력기계와 부속작업기를 포함하며, 순회수리봉사 기간 동안 농업인의 경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검·수리를 무료(부품대금 및 운반비 실비 부담)로 실시한다.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표명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9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이로써 최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최단 기간 재임(6개월) 기관장으로 남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금감원은 당분간 유광열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금감원장 자리에 공백이 발생하면 수석부원장이 원장을 대행한다"고 말했다.



/뉴스시

뷰티 기업 미주시장 판로 개척

전북도와 전북생산산업진흥원이 도내 뷰티소재 기업의 미주시장 판로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생진원에 따르면 지난 4~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8 뉴욕 국제미용박람회'에 화장품 기업 6개사의 참가지원을 통해 216만 달러(약 23억원)의 수출 상담액과 81만 달러(약 8억6000여 만원)의 계약 성과를 냈다.

이 박람회에 2년 연속 참가한 장수군 소재 피코바이오는 현지 언론사인 'NewYork-One'에서 현장 인터뷰를 하고 미국 동부지역의 총판 계약을 진행한데 이어 전주시 소재 에이알앤지는 대형 도매업체와 수출상담 및 샘플 발주를 요청받았다.

전주푸드 청년 서포터즈단 26일까지 모집

전주시가 농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는 전주푸드에 대해 홍보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까지 전주푸드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홍보해나갈 청년 서포터즈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서포터즈단은 농업·농촌영역, 로컬푸드 사업·기관 홍보에 관심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30명 내외이다.

청년 서포터즈 모집에 관심있는 청년들은 전주푸드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hanby@jeonjufood.org)로 접수하거나 팩스(273-2151)로 접수하면 된다.

“사이비 미투 경계해야 일부 언론, 구분 못해”

조기숙 교수 “일회적 성추행 폭로, 미투 본질과 달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가 일회적인 성추행 폭로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본질과 다르다는 주장을 SNS에 올렸다.

12일 조 교수의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전날 '지금은 미투를 오염시키는 언론을 경계할 때'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모처럼 피해자 여성의 용기있는 폭로가 사이버 미투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했다. 미투는 공인의 성적 추문이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 미투운동은 위력과 위계에 의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폭로하는 데에서 시작했다. 상대 권력이 너무 커 조용히 법적으로 이길 수 없기에 다수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실명 공개로 한 남성 추행을 연대고 발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재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여론재판은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 효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일회적인 성추행(으로 느꼈던 행위), 그것도 당시 권력이 없는 사람의 미수행위, 여러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한 번 경험한 것은 미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미 온리(Me only)일 뿐"이라며 "게다가 익명에 기대 증거나 논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하는 건 정치를 시궁창에 처박는 일이다. 미국 경제를 역대 최고의 호황으로 이끈 클린턴은 사생활이 도덕적이어서 훌륭한 대통령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정작 미투가 필요한 곳은 왜곡으로 인격파탄 이끄는 일부 언론들” 강력 비판

이어 "일부 언론은 미투와 사이버 미투를 구분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 사회에 정착 미투가 필요한 곳은 지속적인 왜곡과 오보로 한 인간을 인격파탄으로 이끄는 일부 언론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선 "내가 완전히 침묵하겠다고 한 적도 없거나 설령 내가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그건 누구도 침묵할 수 없는 나의 천부인권"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지난해 말 중국 국민 방문 일정을 취재 중인 한국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폭행한 사건에 "경호원이 기사를 가장한 테러리스트인지 기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냐" "폭력을 써서라도 일단 막고 보는 게 경호원의 정당방위 아닐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논란이 빚어지자 조 교수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